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5주기 추모주간 11월 20일(월) - 12월 9일(토)

김용균 5주기 추모주간 토론회

기후위기와 불안정노동 김용균들의 미래

: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고 노동자 삶까지 폐쇄할 수 없다

여는 말

|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발표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 불안정노동자들이 선다는 것의 의미

| 임용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공재생에너지의 필요성

|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고 노동자 삶까지 폐쇄할 수 없다

|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전체대표자회의 간사

일시 | 2023. 11. 28 (화) 15시

장소 | 대안예술공간_이포

영등포구 도림로126길 9, 문래역 도보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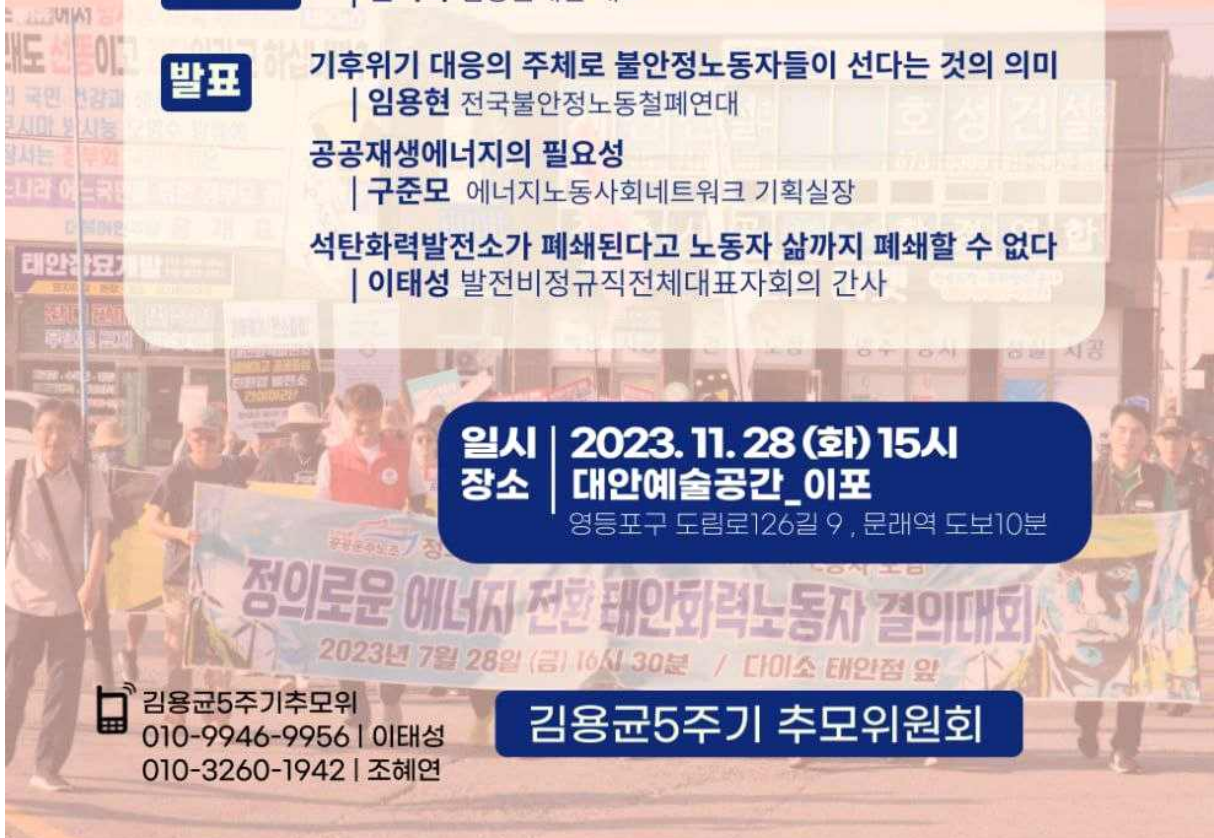


김용균5주기추모위

010-9946-9956 | 이태성

010-3260-1942 | 조혜연

김용균5주기 추모위원회



《기후위기와 불안정노동 : 김용균들의 미래》

- ◎ 장소 : 대안예술공간_이포
- ◎ 일시 : 2023. 11. 28. (화) 15:00~17:00
- ◎ 주최 :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
- ◎ 토론회 순서

사회: 권미정 운영위원장(김용균재단)		
15:00~15:05	여는 말	김미숙 대표(김용균재단)
토론 발제		
15:05~15:25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 불안정노동자들이 선다는 것의 의미	임용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15:25~15:45	공공재생에너지의 필요성	구준모(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15:45~16:05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고 노동자 삶까지 폐쇄할 수 없다	이태성(발전비정규직전체대표자회의)
종합토론		
16:15~16:50	모두 함께	

주제토론

1.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
불안정노동자들이 선다는 것의 의미 p.4
2. 공공재생에너지의 필요성 p.10
3.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고
노동자 삶까지 폐쇄할 수 없다 p.22

종합토론

..... p.33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 불안정노동자들이 선다는 것의 의미

임용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1. 문제의식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탄소배출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산업의 전환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내연기관 자동차 등 산업전환에 직면한 업종의 당사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 주되게 호명되곤 한다.

이 같은 접근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노동운동의 과제를 ‘사라지는 일 자리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의 문제로 협소하게 설정한다는 점이다. 개별 사업장의 전환 속도만 쫓다 보면 능동적인 개입 전략 마련은 물론, 공동의 대응 방안 모색도 어려워진다. 오늘날 기후위기가 전 산업 영역에서 총체적, 다층적인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협소한 주체 설정과 대응 전략을 넘어설 필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산업전환의 과정과 결과 양 측면에서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에 입각해 불안정노동을 양산하는 산업구조를 어떻게 재조직할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을 탈탄소 구조조정에 착수한 일부 업종과 직종에 국한해서는 착취와 추출 중심의 경제생태계를 사회 전반의 필요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재편해 나간다는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할 역량을 준비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권리주체가 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더욱 큰 피해를 겪고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 글의 목적은 기후위기의 피해당사자를 넘어 권리주체로 서기 위해 불안정노동자들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불안정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조건과 상황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동을 위해서는 자본의 무한성장 이데올로기, 이윤추구 시스템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할 것이다.

2. 불안정노동자들의 현실과 기후정의 대안

1) 산업전환 - 일자리 지키기를 넘어

우리는 흔히 기후위기 산업전환의 당사자를 말할 때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내연기

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노동자를 첫손에 꼽는다. 실제로 이들 산업은 탄소배출이 많은 대표적인 일자리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산업전환/노동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급속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위 ‘친환경일자리’, ‘녹색일자리’의 창출 방안은 자본의 성장전략(신산업 진출) 속에서 제기될 뿐이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전환은 필연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노동운동은 주로 폐쇄되는 공장, 사라지는 일자리의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반면 자본의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통해 부각되는 산업과 신규 일자리의 성격에 대한 질문은 좀체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후위기와 불안정노동의 상관관계는 ‘사라지는 일자리’를 넘어 ‘새로운 일자리’에 있어서도 발견되어야 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간 주도의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공공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자본 중심, 이윤 중심의 전환이 아니라 노동 중심, 공공성 중심으로 산업재편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 이는 여타 산업 영역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이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철강·시멘트·정유 등이 산업전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산업에서 민-관 협업을 통한 직무전환 및 재취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환에 따른 고용조정을 전제한 가운데 그 효력조차 의심스러운 소극적 고용정책이 사실상 정부 대책의 전부인 셈이다.

한편, 자동차산업(특히 정규직 일자리의 경우)을 비롯한 여타 산업에서는 산업전환기 노동의 요구가 단순히 일자리 지키기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는 불안정노동자들의 문제가 부각되는 사례는 이들 산업에서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이 같은 경향은 더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 부문은 엔진이나 변속기가 필요 없는 전기차·자율주행차 시대에 진입하면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차체와 엔진만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체의 경우 나머지 부품들은 부품업체를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은 곧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에만 집중해 온 부품사들의 생존위기를 뜻한다.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술역량과 투자여력을 겸비한 완성차는 당장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내 9000여 개 자동차 부품업체 가운데 엔진 부품과 동력 전달 체계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곳은 인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미래차 전환이 자동차산업 전반에 일으키게 될 파장이 만만치 않음에도, 해당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금속노조 차원의 대응계획은 여전히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가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듯이 노동운동 역시 사라지는 일자리,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피해 최소화 전략을 구사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

가령 미래차 시대 전기차를 많이 만드는 게 기후위기의 해결책일 수 있을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2019년 영국의 주요 과학자그룹은 “현재 20억 대가량으로 추산되는 전 세계 자동차를 모두 전기차로 바꾼다면 그만큼 광산 채굴도 폭발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력을 저장하는 차량용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로 리튬이라는 광물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 리튬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50만 갤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기술혁신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종래의 믿음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점은 일찍이 ‘제본스의 역설(Jevons's Paradox)¹⁾’로도 입증된 바 있다. 차량용 배터리 기술의 혁신이 더 많은 자원의 채굴로 이어진다면 이것을 과연 ‘녹색기술’이라 칭송할 이유가 있을까?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친환경적인 대안일 것이라는 생각은 유포된 신화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는 대량생산 시스템에 기반한 이윤 중심의 생산을 공공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다시금 상기하게 만드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에 따라 자가용 중심의 사적 교통체계를 대체할 공공교통에 대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대폭 확충을 우리는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야외노동 - 속도를 줄이고 혹사를 멈추기

기후위기가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야외노동(옥외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도 시시각각 위협받고 있다. 2020년 2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종합대책 마련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 옥외작업 종사자 규모는 전체 331만9217명으로 추산됐다. 산별 직군으로는 농림·임업·어업 종사자 중 85.7%, 건설업 종사자 중 32.7%, 폐기물과 환경복원업 중 30.7%가 각각 야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야외노동을 하는 이들은 폭염기에는 온열질환, 한랭기에는 동상, 황사·고농도 미세먼지 때는 각종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

산업안전보건법은 야외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건강장해를 겪지 않도록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랭작업의 경우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냉장고·냉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로 제한하고 있고, 고열작업의 경우에도 용광로, 가열로, 갱내 등 일부 작업 장소에만 한정하고 있다(규칙 559조). 다만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한랭 혹은 고열작업에도 사업주가 냉난방 장치 가동 등 온도조절, 작업 시간 조정 등 건강장해예방 조치를 할 의무를 열어두었지만, 실제 별도 고시로 정하고 있는 장소는 확인된 바 없다. 노동자가 실제로 한랭·고열 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환경에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냉장고나 용광로처럼 냉기나 열기를 내뿜는 물체나 기계·장치가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법령이 마련돼 있는 것이다.

1) 19세기 경제학자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는 1865년 발표한 『석탄 문제 The Coal Question』라는 소책자에서 이 역설을 제기했다. 제본스는 증기기관 발명으로 석탄 에너지의 효율성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는 석탄 소비가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가들이 절감된 비용을 재투자하여 오히려 석탄 소비가 늘어난다는 점을 발견했다.

2) 김한솔. “옥외작업 322만명, 기후변화로 건강위험 증가”. 「경향신문」. 2020년 2월 24일.

이렇게 한랭·고열작업을 특정 장소에 국한하는 협소한 기준과 규정만으로 추위나 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제대로 지킬 리 만무하다. 기후변화가 일터의 위험을 증폭시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개선운동을 더욱 활기 있게 펼쳐나가야 한다.

기후재난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야외노동 중 하나가 건설산업이다. 빨리빨리 속도전에 떨어져 죽거나 깔려 죽는 것도 모자라, 비 오는 날 무리한 작업강행 지시로 감전사하고, 폭염 속 무더위에 쓰러져 죽는 등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원청·건설사의 공기준수 압박, 하청 건설사의 원가절감 압력 때문인데, 일용직·계약직 노동자가 대다수인 건설 현장에 ‘날림공사’가 판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윤증식에 사로잡힌 원·하청 건설사들이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윤 논리에 포획된 건설 자본의 속성은 ‘난개발’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실제로 건축 및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과정에서 산림과 토양이 훼손되고 건축자재 폐기물이 배출되는 등 건설산업의 팽창이 추출위기를 한층 악화시키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³⁾.

끊임없이 무언가를 짓고 부수기를 반복하는 건설산업의 파괴적인 양상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에너지와 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계획적으로” 줄이는 것은 순전히 이윤을 얻기 위한 건설 자본의 쟁탈전을 끝내야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야외노동은 기후재난에도 취약하지만 급증하는 불안정노동으로 인해 노동권 역시 취약해진다. 기후위기와 더불어 언택트 산업의 가히 폭발적인 성장은 이커머스(e-commerce) 시장이 변성한 배경이 됐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 시장의 돌풍은 물류센터, 택배, 배달라이더 등 물류산업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그런데 이들 물류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야외노동을 하고 있고, 단단계 하청 또는 특수고용·플랫폼 등 고용구조의 왜곡도 심각하다. 또한 이들 야외노동 종사자들의 상당수는 24시간 노동체제에 결박돼 있다는 공통점 또한 갖고 있다. 해당 업종에서 자본이 보다 많은 이윤을 위해 불안정노동자들을 분/초 단위로 쪼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시간 생산체제를 성공적으로 관철시킨 대표적 사례가 바로 물류센터의 당일배송 시스템이다. 쿠팡을 비롯한 물류센터에서는 ‘24시간 물류 처리’를 시장 선점을 위한 모토로 내걸고 로켓배송, 새벽배송 같은 속도전에 노동자들을 내몰았다.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가동되는 시스템에서 일의 속도나 강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밤낮 없이, 휴일과 휴식시간도 없이 연속적으로 작업이 이뤄진다. 대기업 물류센터들이 촉발한 과도한 배송 속도 경쟁은 이처럼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을 매개로 야외(도로상)에서 일하는 불안정

3)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유엔환경계획(UNEP)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건설산업의 에너지 소비 비중은 35%, 직간접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8%로 나타났다. 이 중 건물을 운영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28%를, 건설 부문에서 배출되는 양이 약 10% 비중을 각각 구성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24시간 노동체제를 이제 당연시하고 있을 정도다. 플랫폼 노동이 기후위기시대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이전의 임금노동과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장 출퇴근, 상시고용, 8시간 정규노동을 표준으로 삼는 전통적 고용관계 대신 플랫폼이 일감을 매개하는 중개인 행세를 할 뿐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이들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 책임도, 노동자의 권리도 안중에 없다.

이처럼 기후위기시대 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그에 맞서 올여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폭염기 휴식권과 냉방장치 설치를 요구했고, 라이더유니온은 폭염수당, 기후실업급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야외노동을 하는 이들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동을 위해서는 극단적인 추출과 생산의 속도를 적극적으로 늦춰야 한다.

3) 필수노동 - 위협은 당연한 게 아니다

기후변화로 잦아진 자연재해와 감염병재난 상황은 공중보건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발발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징후였다. 우리는 이 같은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과 신체·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의료와 돌봄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실감하게 됐다. 그러나 보건의료, 돌봄 노동자를 비롯한 필수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은 당연한 의무로 간주되고, 그들의 권리는 나중에 밀려나는 모습 또한 우리는 목격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이후 널리 확산된 개념으로, 재난 속에서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을 뜻한다. 한국의 경우 2021년 5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률에서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뿐,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이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필수업무,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대면업무의 지속이 불가피한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송, 청소, 운송업 종사자 등을 필수노동자로 봤다.

참고로 노조법에서는 필수유지업무를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제42조의2)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필수유지업무 종사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규정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3년여 동안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과로와 소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사망, 돌봄노동자, 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위험 노출과 감염 문제 등은 특히나 심각했다. 그러나 위협을 무릅쓰고 일한 이들의 노동은 정작 값싸게 취급됐다. 필수노동자 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2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와 대책을 수립한 지자체 수는 전체 243곳 중 10곳이 채 안 되는 실정이다.

기후위기 속 필수유지업무를 하는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할 권리란 무엇을 말하는가?

필수노동자들은 위기상황이 생길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 한다. 지진이나 산불, 집중호우, 폭설 같은 자연재해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재난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노동자들은 공동체의 안전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상 일터의 재난위험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은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비좁고 비탈진 곳에 소방용 호스로 살수하는 일을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는 현재 전국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에 43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 기간제 가 275명, 공무원(무기계약직)은 160명이다. 산림청은 2020년 특수진화대원 정원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늘리면서 일부 노동자만 공무원으로 전환했지만, 처우개선 효과는 극히 미미했다. 화재진화작업에 착용하는 옷과 장갑은 방염기능만 있고 방수기능은 없어 공중에서 헬기가 물을 뿌리면 이를 흠뻑 맞은 노동자들은 추위에 바르르 떨곤 한다. 이 때문에 특수진화대원 노동자들은 방수처리가 된 피복과 장갑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돌봄서비스·운송서비스·환경미화·콜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고질적인 인력부족과 그에 따른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기후재난 현장을 최일선에서 맞닥뜨리는 필수노동자들에게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재난상황은 일반 시민만이 아니라 필수노동 종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노동자의 알 권리, 거부할 권리, 참여할 권리가 지금보다 더욱 확대돼야 한다.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보편적 공공서비스’의 실현은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노동에서 시장적 접근을 배제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3. 불안정노동자들이 권리의 주체로 선다는 것

불안정노동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권리가 보장된다면,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일터 환경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 과도한 노동시간의 단축, 적정인력 충원 요구 등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권, 건강권 보장 요구는 이윤추구에 매몰된 자본과 끊임없이 불화할 수밖에 없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는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자본을 아래로부터 견제할 힘을 착실히 다져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체제전환이라는 담대한 전망은 결국 내가 일하는 현장의 구체적인 과제와 만나야 한다. 권리주체로서 불안정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때 시스템을 변혁하는 대중적 힘도 결집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주제별 토론②】 기후위기와 불안정노동

공공재생에너지의 필요성

구준모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2023.11. 28. 김용균 5주기 추모주간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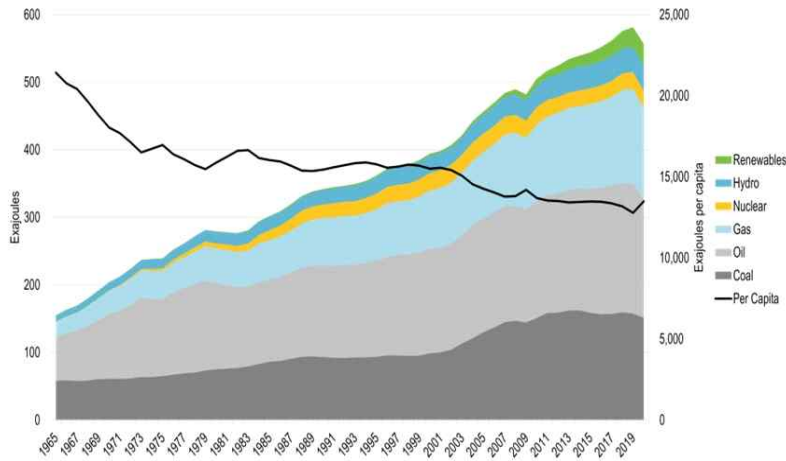
공공재생에너지, 왜 필요한가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에너지 전환의 현실



- 우리나라 2022년 재생에너지 비중 8%
- 태양광 및 풍력 5%

- 세계 에너지 소비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
- 모든 에너지원이 증가하는 와중에 재생에너지가 일부 담당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의 82%를 화석연료가 담당하며, 이 비율은 1990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

- 유엔 통계국, 2022년 <에너지 통계 포켓북>

민간과 분산을 통한 전환? 재생에너지 전환의 신화

- 민간부문은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에 실패 (→한국 공공부문이 못하는 까닭은? 정부 민간자본 지원과 공공기관 부채 관리)
 - 2022년 재생에너지 투자는 사상 최대인 5000억 달러에 달했으나 1.5도씨 목표에 필요한 투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함
 - 지금까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 투자는 공적 자금의 지원에 의존
 - 공공이 민간자본을 지원하는 모델(혼합금융)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민간자본의 수익성이 우선시 됨
- 분산형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민주화하고 탈탄소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한국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을 통한 전력산업 민영화)
 - 협동조합이나, 지방공기업과 같은 공공적인 분산형 에너지 확대 기획은 자유화, 민영화된 시장 환경에서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분산형 에너지 실험(특히 투자 참여형)은 참여할 자금과 여유가 없는 사람을 배제함
 -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만으로 에너지 전환 수요를 충족시키긴 어려움
 -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규모의 계획과 조정이 필요하고, 국가적 차원이 중요
 - 모든 지리적 규모에서 전면적 공영화와 민주화, 공공협력이 필요

* Energy Transition Mythbusters <https://www.tni.org/en/publication/energy-transition-mythbusters>

이윤,이윤,
이윤!

돈 놀이
전쟁터가 된

에너지 전환



민자사업 구조로는 정의로운 전환 불가능

	2016	2017	2018	2019	2020
재생에너지 전체	3.05	3.64	4.40	5.24	6.41
태양광	0.98	1.34	1.71	2.40	3.33
풍력	0.30	0.38	0.41	0.45	0.54
태양광+풍력	1.28	1.72	2.12	2.85	3.87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발전 설비용량

	이창훈 외(2019)	엄지용 외(2021)	고은 외(2022)
태양광	305GW	345GW	375GW
풍력	152GW	139GW	194GW
합계	457GW	487GW	569GW

2020년 설비 용량

- 태양광 17.3GW
- 풍력 1.6G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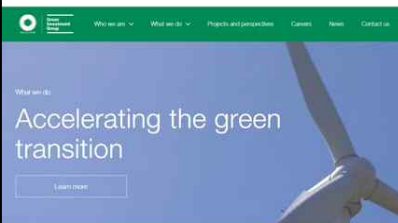
- 향후 28년 동안,
438~551GW 설치

- 전쟁의 격화, 확대?
- 대안 경로 마련?

더 크고 나쁜 사례, 해상풍력: 금융자본, 외국자본의 장악

전남에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 조성,
인프라 투자 귀재 맥쿼리도 뛰어 들었다

데일리 ESG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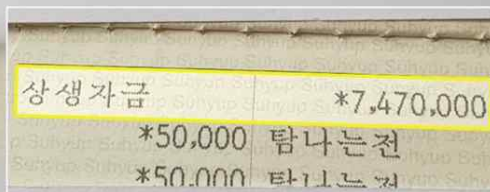
- **맥쿼리(GIG)**
부산청사포, 다대포, 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 기장해상풍력발전, 해운대해상풍력발전, 거문도해상풍력발전, 맹골도해상풍력발전, 부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
- **오스테드**
인천해상풍력1호, 인천해상풍력2호
- **에퀴노르, 셸, 토탈, 블랙록...**

추자도 18조 해상풍력발전 추진에...1800명 주민 쪼개져 '시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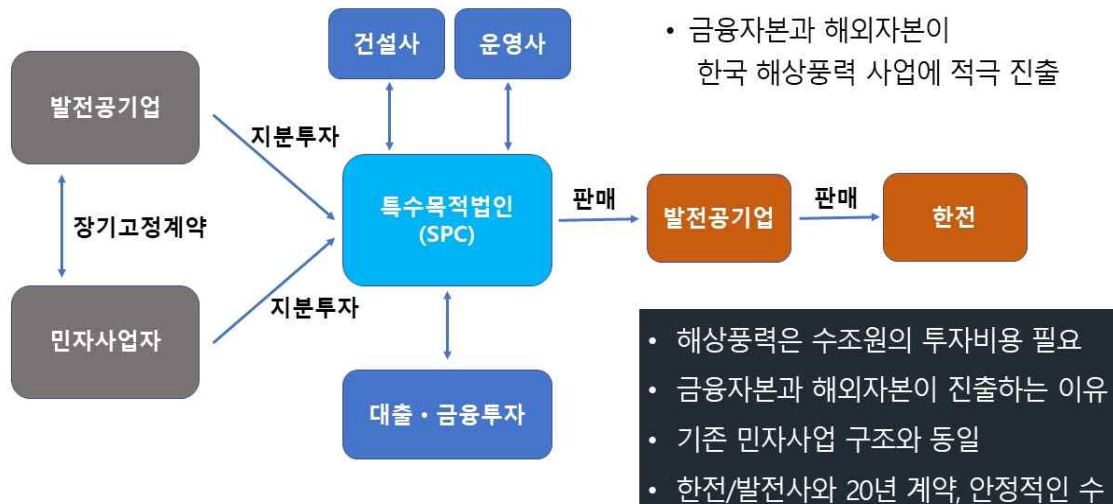
최호준 기자 +구독

f t s l ★ 📄 가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2026~2027년 완공 목표
어선업자해녀 300만~1천만원 위로금...일부 주민 반발



한국의 해상풍력 민자사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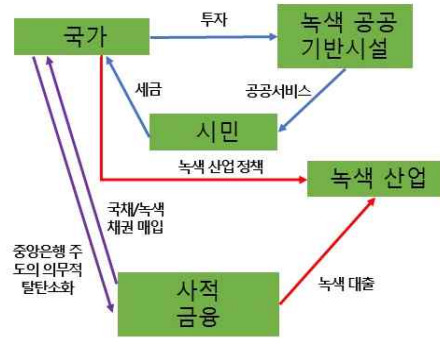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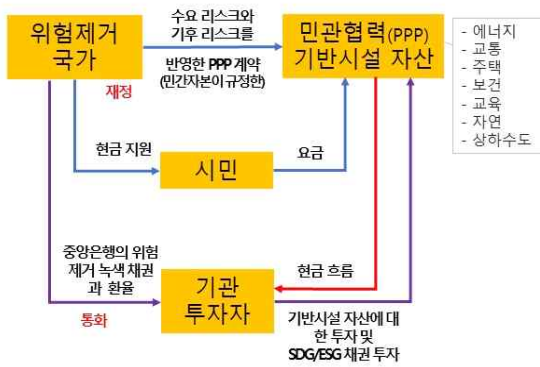
위험제거 국가: 민간을 위한 마중물?

- 영국의 비판적 금융경제학자 Daniela Gabor는 최근 녹색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을 **위험제거 국가(de-risking state)**로 포착.
- 위험제거 국가는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에 대한 사적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위험을 줄이는 데 주력함으로써, **사적 인프라 자본의 권력을 강화**함.
- **투자성(investability) 창출**(또는 **bankability, 금융 적합성**)이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정치경제 논리로 작동하면서 사적 자본 우위의 국가-자본 관계가 심화됨.
- **사적 금융 중심의 전환 기획**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도드라지는 현상으로, 이를 '**월스트리트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음.
- 한국 정부의 '**마중물론**'에는 이러한 위험제거 국가의 논리가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대형 재생에너지 사업도 그러함.

사적금융 중심 vs. 공공투자 중심

사적 금융 극대화 방식의 전환(월스트리트 컨센서스): 새로운 자산에 대한 리스크/수익률 교환

공공투자 극대화 방식의 전환



* Daniela Gabor, "Greening Finance for the Low-carbon Transition," UNCTAD Intergovernmental Group of Experts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5th Session (March 23, 2022)

한국해상풍력(주)는

- 어민과 공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합니다.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종합 추진계획(2011)

- 비전: 세계적인 해상풍력 강국 구현
- 목표: 해상풍력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추진과제
 -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성공적 개발
 - 국내 전주기 Supply Chain 구축
 - 국내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혁신 기술 개발

주관사: 한국해상풍력(주)	주관사: 민간기업
1단계(실증)	2단계(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상 테스트베드 실증 핵심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ck Record 확보 비즈니스모델 개발
60MW	400MW급
2011년~2020년	2023년 상업운전
3,718억원	약 2.4조원
	3단계(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단지 개발 상업운전
	2,000MW
	예정
	약 10조원

한국해상풍력 회사개요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및 운영 전문기업

회사명	주)한국해상풍력
설립목적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주요사업	해상풍력 단지개발/건설/운영/R&D 수행
중요역무	해상풍력관련 제도·기술개발/기술·인력·인재양성
설립일자	2012. 12. 7.
자본금	2,128억원 (실종단지 PF 1,990억원)
일직원	30명
주주원형	한진(25%), 발전8사(75%, 각 12.5%)

2020년 1월 종합준공까지 모든 순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 2012-2016: 풍황계측 (30기, 06)
- 2013: 발전사업허가
- 2015: 공사계약체결
- 2016: 전환개발실시 계획 승인
- 2017. 05: 해상풍력단지 설치 완료
- 2018. 05: 해상발전소 설치
- 2018. 10: 타원기(20기) 설치 완료
- 2019. 06: 계획단계 (30기, 06)
- 2019. 07: 타원기(20기) 완료 상업운전개시
- 2019. 10: 시공검사 완료
- 2020. 01: 종합 준공

제주도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활성화계획

• 2015.9.2. 제주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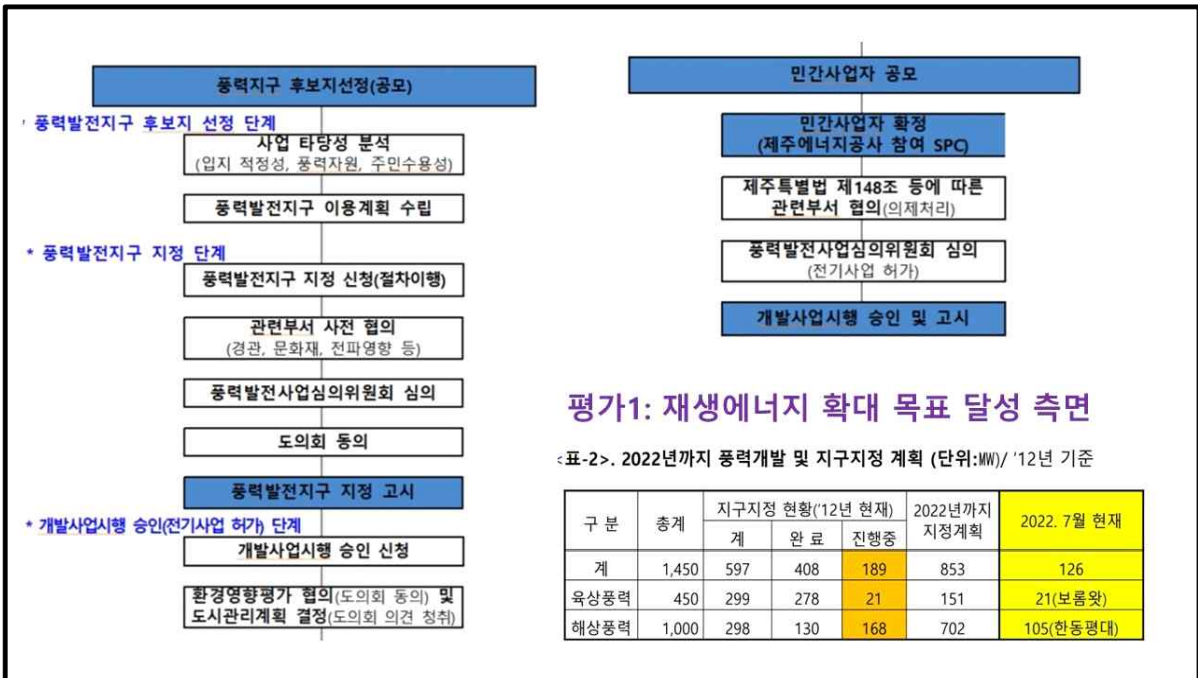
- 지향하는 가치: 풍력의 체계적인 관리, 제주환경의 가치를 최우선, 도민의 주도적 참여
- 제주에너지공사: 풍력개발 지구 선정, 인허가 이행, 사업 공모
- 사업시행: 공모에서 선정된 민간기업

□ 제주에너지공사 중심의 풍력자원 개발지역 선정

○ 해상풍력발전

↳ 제주에너지공사가 사회수용성 문제 해소

- 제주에너지공사가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사회수용성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
- 사업추진중 발생하는 새로운 민원에 대하여도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 참여자로서 해소해 나감.
- 지구지정 및 인허가절차 완료 후, 경쟁에 의한 풍력발전 민간 참여사업자 선정, 풍력발전 공동개발 추진



평가2: 사회환경적 가치 측면 (김동주, 2022)

□ (사회)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도민공감대는 확보 했는가?

- 해당 지역 주민, 해녀 및 어촌계, 전 도민적 수용성은?

☞ 마을-공사 간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주민동의서를 받고 추진했으나, 마을 내/마을간 갈등발생

□ (환경) 환경영향 검토는 철저했는가?

-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및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검토?

☞ 환경평가 직접조사 미수행, 기타 해상풍력 해양공간기본계획 미반영

□ (경제) 투자자의 원활한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했는가?

- 향토기업 우선적 기회를 부여, 주민투자 참여 방안?
- 공기업, 민간기업 등의 투자를 유치하고, 제주에너지공사도 참여하는 개발방식인가?

☞ 투자공고 준비중, 향토기업 논란, 주민투자금 확보문제, 공사 자본금 증액('19년, 600억 → 1,300억원)

□ (기술) 기자재 공급 및 전력계통운영, 신기술의 성숙도는 충분한가?

- 국산 풍력발전기 우선 적용, 출력제어 구축, BESS 설치, 양방향 송수전 제3연계선 설치?

☞ 국산/외산 경제성 검토, 출력제어 지속 시행, ESS 100 MW, 제3연계선 공사중, 제1연계선 역송

지자체 주도 계획과 민간 주도 실행, 금융 조달의 괴리

- 지역 에너지공사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도' 계획 유의미함
- 그러나 제주에너지공사의 공공 중심 계획에도 불구하고, 최종적 사업 실행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이 주도
- 제주에너지공사의 재무적, 기술적 역량의 한계가 작용
- 직접적인 공공투자, 발전공기업 등과의 공공협력 방식이라면 달랐을 것

① [공공 계획 및 지구지정] 지역주민과 지자체(지역에너지공사)

② [공공 사업자] 발전공기업

③ [공공 금융] 공공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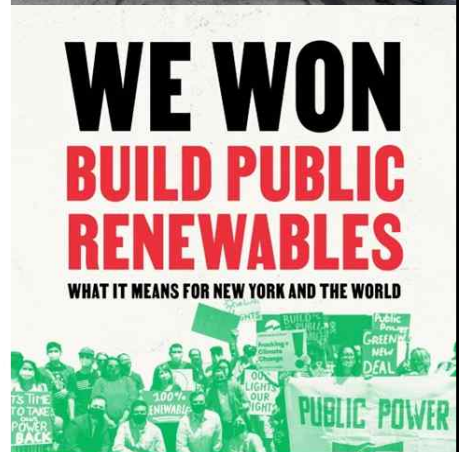
- 공공 중심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3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본다면, 제주의 사례는 첫번째 단계에 머물
- 공공 계획 + 공공 사업 + 공공 금융이 결합되어야 공공중심 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

뉴욕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배경

- 2019년 <기후 리더십 및 공동체법>** (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Act)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뉴욕에 공급되는 전력 중 풍력/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70%와 2040년까지 100%로 확대하는 목표 설정
 - 현재 뉴욕주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은 4%에 불과 (수력 22%)
- 뉴욕전력청** (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 현재 NYPA는 주 전력의 20%를 생산. 총 3개의 수력발전소(1개의 양수발전소 포함), 2개의 천연가스 발전소(+ 계약된 1개의 천연가스 발전소), 여러 소규모 수력발전소, 7개 부지에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peaker plant)를 소유하거나 계약하고 있음.
 - NYPA는 미국에서 가장 큰 공적 전력업체(public power utility)로서, 가장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 주고객은 지자체와 주 정부의 건물에서부터 에너지협동조합, 대/중/소기업, 비영리단체 등의 1000여 개 기관/기업/단체이며, (민간)유틸리티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전력의 일부를 도매시장에도 판매
 - 2023년 5월에 통과된 BPR로 NYPA는 뉴욕주의 청정에너지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과정

- Public Power New York(PPNY)**
 - 공공 전력 뉴욕 연합(Public Power NY Coalition)은 투쟁하는 공동체, 시민단체, 뉴욕 주민이 참여하는 주 차원의 운동기구
 - 이 법은 주에서 뉴욕 전력청이 공공 소유의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건설하고, 에너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절감하며, 최종적으로 녹색 에너지 부문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여 수만 개의 녹색 노동조합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만들 것
 - 1199SEIU, NYSUT, PSC-CUNY, UUP 및 UAW 9A를 포함하여 뉴욕에서 백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법안을 지지
 - 4년간의 캠페인과 노동조합 설득, 주의회 당선, 대중적 압력을 거쳐 2023년 5월 2일 법안이 통과됨



HOW IT WORKS

The Build Public Renewables Act, or BPR, empowers the publicly-owned 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to build the wind and solar we need, in a process guided by the people.



PUBLIC OWNERSHIP

All NYPA projects and their subsidiaries will be **publicly owned**. Any and all contracting will be to aid NYPA in scaling up at the pace we need, subject to BPR's labor standards. No profiteers here.



LABOR & JUST TRANSITION

Workers made the world. Now they'll save it with standards set by the AFL-CIO that ensure prevailing wage, diversity in hiring, and more. Also establishes the Office of Just Transition that trains workers for the renewable energy sector.



#BuildPublicRenewables는 에너지 시스템을 혁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노동 계급의 상황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NYPA 프로젝트는 공공 소유로, 높은 수준의 노동 계약, 공공 사업 및 기타 노동 및 민주주의 표준을 보장합니다. 모든 계약은 동일한 BPR 소유권 및 표준에 따라 NYPA의 빠른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석 연료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구호에서 현실로 만드는 #BuildPublicRenewables. AFL-CIO의 표준 기준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기구를 설립하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노동조합이 있는 친환경 일자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과제1: 경쟁체제 종식과 발전공기업 통합

- 민영화/자유화에 대한 재검토: 세계은행(2019) 등 전력 자유화 정책 실패 인정
- 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징
 - 초기 투자 및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크고, 운영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적음
 -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 사업과 유사
 - 신중한 입지 선정, 사업 추진과 저금리 금융 조달이 중요
- 민간사업의 불확실성이 크고, 과소투자과 초과이익의 문제 발생
- '신속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견고한 실행'을 위해서는,
- 인력 운영, 사업 역량, 재정 조달의 측면에서 지금과 같은 수익성 경쟁체제를 종식하고, 발전공기업 통합이 필수적
- 신속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
- ①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완전 공영화 ②발전공기업의 통합과 적극적 재생에너지 사업 권한 및 목표 부여 ③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스공사와의 통합적 운영

1.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완전 공영화

- 3대 에너지 공기업이 모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음
- 시장형 공기업이자 상장기업으로서 수익성을 추구하고 공적 지원 및 역할을 담당하는 데 한계가 큼
- 정부 재정 및 공공 녹색투자은행의 투자를 통한 공적 역할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장된 주식을 국가가 매입하는 방식의 완전 공영화가 필요

2. 발전공기업의 통합과 적극적 재생에너지 사업 수행

- 공공 중심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서는 6개 발전공기업의 통합이 필요
-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인적, 기술적, 재정적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일각에서 주장하는 발전원별 재편은 하나의 에너지원에 고착되기 때문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부적합한 구조
- 통합된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

3.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스공사와의 통합적 운영

- 최근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겪은 것처럼 LNG가 에너지 안보와 전기 및 난방 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재생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이 되기 전까지 LNG의 수급과 탄소고착 방지는 매우 중요함 (현재는 구분별한 직수입 경쟁으로 불필요한 터미널과 시설이 우후죽순 생기는 중)
- 그린 수소의 생산과 확보를 위해서도 가스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 (수소의 색깔 만큼이나 공공성이 중요)
- 한전 및 발전공기업과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서 전환을 위한 가스의 역할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과제 2. 민주적 구조 개혁과 공공협력

- 통합된 발전공기업은 민주적으로 통제, 운영되어야 함
- 시장형 공기업 제도, 경영평가, 이사회 구성 측면에서 대대적 개혁이 필요
-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요금으로 모든 비용을 회수한다는 전제하에 운영할 필요가 없음. 재생에너지 투자 비용은 매우 장기적(20-30년)으로 회수
- 재생에너지 사업 입지 선정 및 추진 단계에서 지역주민, 지자체의 참여 과정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공공협력 제도화
- 계획 - 사업 - 투자 3요소가 모두 공공 (협력)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

과제 3. 공공투자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 만들기

- 정부 재무 관리 기조의 변화
- 국민연금과 공공 녹색투자은행의 중심의 투자 전략 필요
- 재생에너지 제조 산업 기반 조성과의 연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 포함 내용: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재생에너지의 공공재 및 공유재 성격, 공공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공공 투자, 한전 및 발전공기업의 역할, 발전공기업 통합 재편 방안, 화석연료 부문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사업의 고용 및 노동 조건 등
 - 공공재생에너지 기본법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통합발전공사법
-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 사회적 공론화와 지지 확보
 - 민영화를 통한 전환의 신화 폭로 + 공공적 전환의 필요성 + 공공적 전환 로드맵 제시
 -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안으로서 공공재생에너지 지지 확대

<끝>

한명의 희생자도 없는 정의로운 전환 해법, 당사자와 대화해야 한다.

이태성 |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전체대표자회의 간사

1. 들어가며

이 글을 쓰며 1992년 대학 시절에 접했던 〈내일은 늦으리〉 앨범과 당시 인기스타 서태지, 신승훈, 이승환 등이 참여한 노래인 〈더 늦기 전에〉가 떠올랐다. 그때도 산업과 자본의 성장을 중요시하던 시기이기에 환경과 기후재앙은 먼 이야기였다. 제목에서 느껴지듯 ‘내일은 늦으리’라는 문구와 가사는 요즘 말로 ‘뺨을 때린’다.

“어린 시절에 떠올렸던 정든 냇물은 회색 거품을 가득 싣고서 흘러가고 공장 굴뚝에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내일의 꿈이 흐린 하늘로 흩어지네. 하늘 끝까지 뻗은 회색 빌딩 숲 이것이 우리가 원한 전부인가. 그 누가 미래를 약속하는가. 이제 느껴야 하네. 더 늦기 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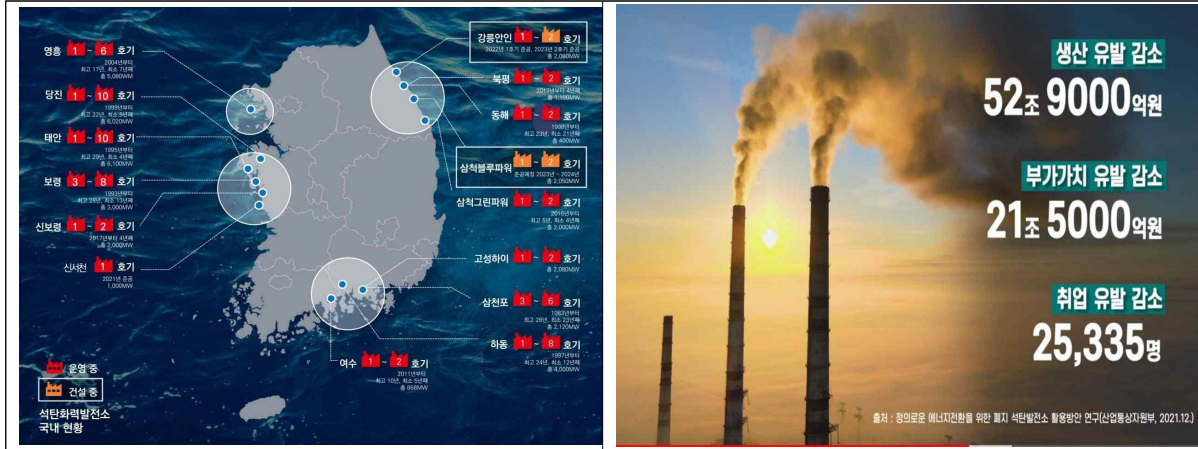
30년이 지난 지금, 가사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었다. 폭염과 한해 큰비와 홍수, 폭설과 한파, 잦은 산불 등 기상이변은 물론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일터와 삶터의 변화와 대응이 시작되었고, 여러 국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서고 있다.

2020년에만 전 세계 1500여 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며, 국내에서도 거의 모든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동참했다. 그러나 선언에 걸맞은 대응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많은 발전노동자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폭력적인 방식을 넘어 잔인하게 살인 당하고 있다.

2019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는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녹색일자리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며 현장의 의견과 설문조사, 연구용역으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객관화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관심과 보도가 이어졌고 발전소에 일하는 노동자가 있음을 시민과 정부에 알렸다. 지역사회 붕괴, 노동자 고용문제 피해는 경제적 감소금액 75조와 2만5천 명의 일자리 상실이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그리고 이는 5년이 지난 문재인·윤석열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연구한 수많은 각종보고서에도 기술되어 있다. 이번 글을 통해 더 명확히 이야기하려 한다.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현황 (총 58기 중 2036년까지 28기 폐쇄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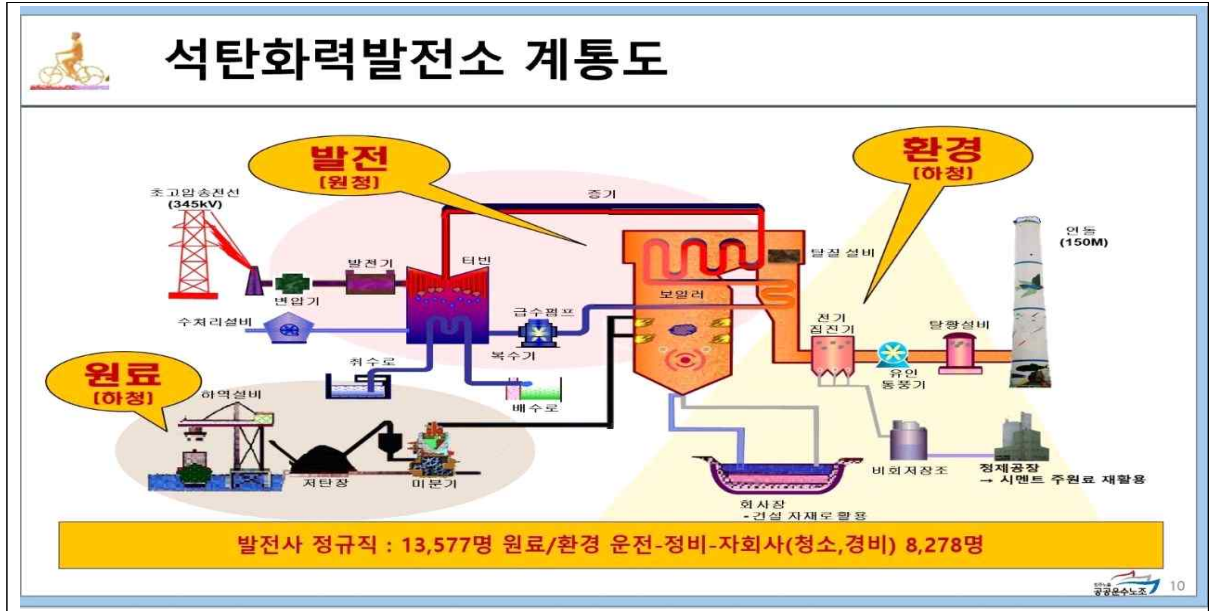


■ 석탄발전소 노동자 인원현황 2022.6월 기준

구분	상주인원	
발전사 -석탄화력, lng발전, 신재생, 기타(본사등)	남동	2804명
	남부	2652명
	동서	2531명
	서부	2799명
	중부	2791명
	합계	13,577명
구분	상주인원 (석탄화력, lng발전)	석탄화력인원
경상정비	한전KPS	1,486명
	한전KPS 하청	308명
	1차하청	2,295명
	2차하청	437명
연료환경설비 운전	1차하청	2,474명
자회사(청소,경비,시설)	5개 발전자회사	1,278명
	합계	8,278명

2. 단 한명의 해고 없는 발전노동자 고용보장

발전소는 원·하청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소위 정규직은 13,577명, 비정규직 8,278명, 총 인원 21,855명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일자리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를 배제시키지 않는 민주적 의사소통 ▲시혜적 일자리 알선 대책이 아닌 발전소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적극적인 노동전환 대책 이행 등이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며 싸우고 있다. 이런 사항은 중앙정부뿐만이 아닌 해당 폐쇄지역의 지방정부, 발전사, 지역주민, 시민사회까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보의 교류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발전소 폐쇄에 따라 발전노동자들의 실직-재취업 사이 시간적, 공간적, 교육적 불일치가 일어난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34년까지 LNG 발전소 24기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34년 30기 석탄화력 폐쇄와 LNG 건설 시기 불일치가 발생함에 따른 해고는 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노동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넘어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관련 산업분야 노동자들의 우선고용-후교육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LNG발전 전환의 허상

석탄 → LNG 전환 시

4,911명

기존인력의 61%

전환 불가

전환 불가 협력업체

69%

발전본부

46%

원료 및 기타설비	환경 설비	운전	부두	청소	경비	지원
			42명	37명	75명	경영지 원 등
		0명		37명	24명	

• 발전 자회사

* 에너지 전환 중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

구분	내용(출처 : Sustainable Energy Jobs Platform)
시간적 불일치	일자리 감소와 창출의 시간대 차이에 따른 마찰적 실업 등
공간적 불일치	일자리 감소와 창출의 지역적-공간적 차이에 따른 문제
교육적 불일치	재교육으로 해소되지 않는 소멸일자리-신흥일자리 간의 작업 패턴과 기술 편차 등
부문간 불일치	신흥산업에서 사양산업이 공급해왔던 품목과 다른 원자재-중간재를 필요로 할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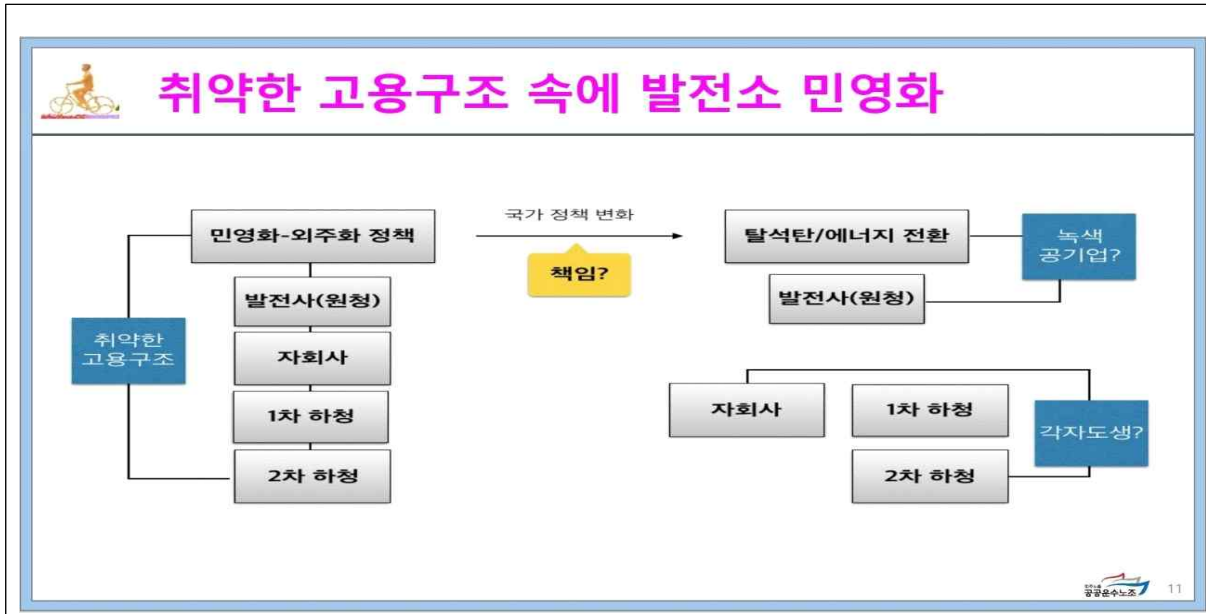
하지만 정부의 모습은 마치 레고 블록을 끼워 맞추듯 “여기 있는 노동자를 저기로 옮기면 된다”는 식이다. 현장에서는 “그 자리가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로든 가서 우리 가족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밝은 빛을 만드는 노동자로 남고 싶다”고 한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5%가 고용보장이 된다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고 답한다. 심지어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도 당장 폐쇄해야 한다는 노동자도 5.2%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조기폐쇄와 LNG 발전소 건설 반대입장에 대한 발전노동자의 정서는 아직까지 찬성의 기류가 강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국민 정서가 대부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쪽으로 기울기도 했지만, 교육이나 자료 공개 등 노동조합에서 기울인 노력에 힘입어 자신의 삶의 터전인 발전소 폐쇄와 후세대를 위한 기후정의를 만드는 데 당사자들도 동의한 것이다. 지금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자기 삶을 버리면 서까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의 미래에 대한 정책을 얼마나 잘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노동자들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참여와 호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고용에 대해 매우 불안하다’는 답변이 2021년 37.5%에서 2022년 56.9%로 19.4%p 증가했다. 단적인 예로 삼천포화력발전소 1, 2호기 협력사에서 근무하던 발전노동자가 2021년 4월 삼천포화력발전소 1, 2호기 폐쇄로 인한 전환 배치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스트레스로 2021년 10월 15일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취약한 고용구조 속에서 발전소 민영화는 2002년부터 가속화되었고, 2018년 위험까지 외주화한 결과 24살 청년노동자 김용균이 사망했다. 말 그대로 아래로 위험은 가중되고 있으며 발전소 폐쇄의 시계와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외주화 시계도 흘러가고 있다. 각자도생이란 말이 가슴을 후벼 판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좌초산업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 당시부터 충남과 경남에 집중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한 목적도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송전선로 확보 경제적 타당성, 부산, 울산 대도시 전기 송배전을 통한 안정성이었다. 이제 그 산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산업을 폐쇄시키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가장 큰 고용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90% 이상 국가책임을 언급한다.



3. 공공성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5개로 분할된 발전사와 고 김용균 사고로 알려지게 된 전력시장의 위협의 외주화 구조를 청산하고 국민 기본권, 필수재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이제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 해법으로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발전5사 통합 및 민자LNG, 석탄화력발전소 재공영화를 통한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 시민사회와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는 방식도 제안되어야 한다. 사실 현장에서도 설왕설래 이야기가 있다. LNG발전소 역시 탄소를 배출하고 연료, 환경설비는 사라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고용창출도 미비하다는 것이다. 또한 아직 상용화가 진행 중인 암모니아 혼소를 통한 탄소 감축과 LNG발전소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한 혼소 및 수소 전소 터빈 도입으로 그린수소 활용처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등 다양한 방식의 수명연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역시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다. 전국 유일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을 통해 도민이 참여하고 이익의 정의로운 공유 실현은 물론, 개발에서 운영까지 모든 과정의 공공성을 강화한 프로젝트이다. 평가에서 분명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초기 막대한 재생에너지 자본 투입 역시 국가나 발전에너지 공기업이 책임짐으로써 국가시스템이 작동하는 공공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의 경우 태양광 역시 재생에너지로 한몫을 하고 있다. 또한 사양화·취약계층에게도 지원방식을 만들어 풍력, 태양광 공유화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보호대책이 준비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시대에 맞는 생태, 주민수용성, 갈등비용 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오히려 더 과감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만들 때처럼 클린재생 에너지도 국가와 발전사가 역**

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발전노동자는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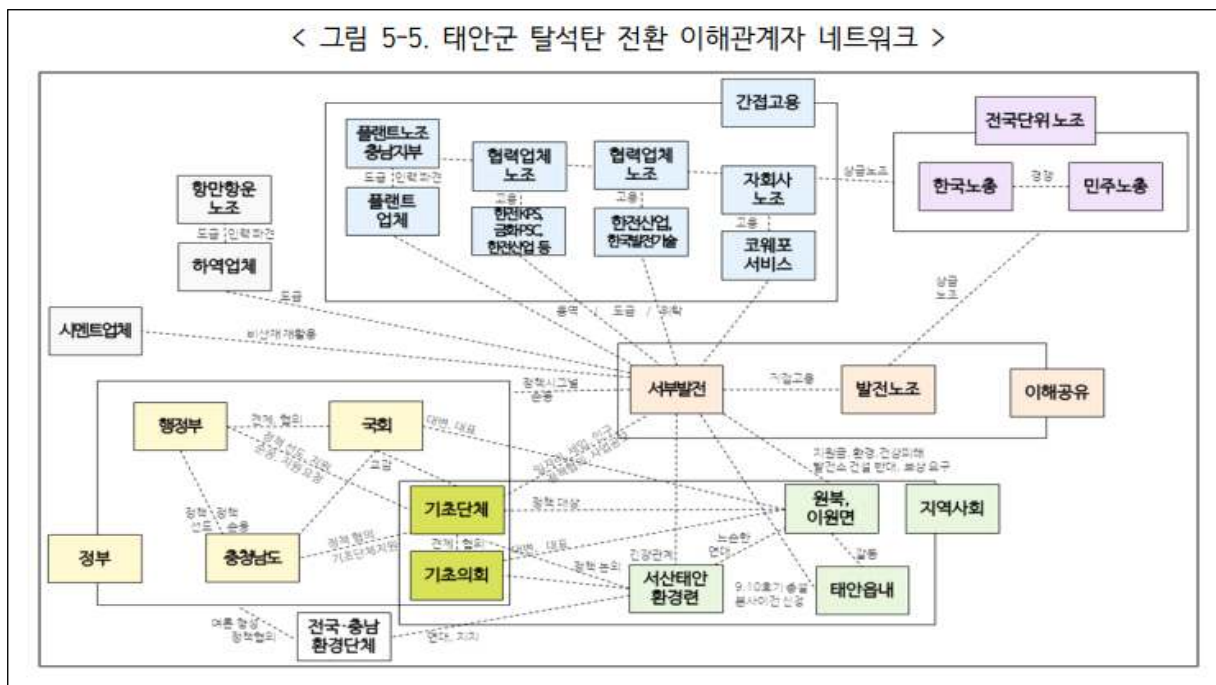
4. 민주적 거버넌스 구성 통한 노동자 참여 보장과 법제화

현장노동자들은 실질적인 해법을 요구한다. 바로 고용보장을 위한 에너지전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사회적논의기구의 필요성은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에 관한 위탁사업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큼.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전략과 과제 21. 02



- 면접조사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관한 정보를 언론이나 노동조합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보를 확보한 경우에도 노동전환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음.
- 참여는 단순히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의 전문성을 정책 결정 과정에 동원한다는 의미도 가짐. 이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수단을 설계할 수 있음.
- 일의 세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는 특정 기업 수준을 뛰어넘어 산업·업종 수준에서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논의 틀의 마련, 좁은 의미의 법상 '근로자'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일하는 사람의 포섭, 단체교섭과 함께 다양한 층위에서의 참여와 협의를 요구함.

따라서 거버넌스는 단층적이기보다 중층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지금 정부는 지역별, 산업별로 기후위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찾아보기 힘들다. 논란 속에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정의로운 전환 조항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사후적 보상 모색 수준을 넘어 노동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노동과 다양한 의견그룹 중심의 전환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부, 노동을 참여시키는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 진전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기업 지원 중심의 일방적 산업 전환과 재편, 구조조정은 결국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와 산업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다. 고용과 노동 정책, 사회 정책과 함께 가는 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책 방향 결정은 물론, 기획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노동자 참여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도 요구된다.

- 발전산업을 예로 들어, 중층적 거버넌스 운영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국 수준의 사회적 대화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설정한 탄소중립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기능을 담당함.
 - **사회적 대화의 의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쇄에 따른 전력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이를 위한 전력(에너지) 산업정책이 핵심이 될 것임.**
 -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은 전력산업정책의 기초와 연동해서 논의될 것임.
 - 고용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고용보장의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방안을 확인하는 것임.**
 - **노사간 단체교섭 측면에서 보면, 초기업 차원에서 이뤄지는 발전부문의 단체교섭에서는 발전 관련사의 공통적인 대응방안이 논의될 것임.** 특히 이 수준의 단체교섭에서 고용보장협약이 체결되고 발전사 차원의 통합적인 전환 계획이 마련됨.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발전공기업 이외에도 자회사와 협력사 노사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사실임.**
 -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임.** 이는 초기업별 수준에서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 계획을 마련하는, 일종의 보충적인 논의통로라고 할 수 있음. **공동결정의 체계에는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공공기관의 경우) 노동이사제와 같은 다양한 경영 참여의 통로가 포함할 것**
 - **(가칭)에너지전환기금의 설치와 사회안전망의 확충 있음.**

이런 제안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3당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노동/일자리 전환 법안을 발의했고 ‘반쪽짜리’라는 비판 속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또 다시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지난 8월 25일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노동자들이 요구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가 아닌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전문위조차도 노동부가 6개월 내 노사동수가 참여한 전문위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으로만 남았다. 법안명에 ‘정의’가 빠진, 지금도 이미 유명

무실한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노사동수 참여도 보장받지 못한 전문위가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애초 산업전환의 당사자들은 전환에 따른 피상적 피해 손실 지원 법안을 바란 것이 아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전환에 맞춰 재생에너지로의 일자리 전환 및 지역의 산업구조 재편과 지속가능한 지구의 유지를 위해 지금과는 다른, 개념의 큰 틀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길 바랐다. 그러나 여야 거대정당 앞에 정의로운 전환법은 한낱 산업구조 개편 시 발생할 해고를 당연시하며, 지역경제 및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보충하는 법으로 변질됐다.

한편 8월17일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3당 공동발의와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사회적 위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주요 요구 중 하나는 산업·업종·지역별 논의TF 설치이다. 그 참여 또한 노사동수 구성과 시민까지 참여될지는 미지수이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이 충남, 경남, 인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전환지원법·석탄화력폐지지역 지원특별법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근거법은 에너지전환지원법(양이원영의원 안)과 석탄화력폐지지역 지원법(발의 준비 중. 장동혁의원 안)이 있음
- 에너지전환지원법의 경우, 석탄화력 발전사업 지정 철회 사유·보상 내역을 두고 산업부와의 이견
- 석탄화력폐지지역 지원특별법의 석탄발전소 소재 5개 시·도(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 의견으로 현재 발의 준비 중
- 탈석탄 추진에 따라 어떤 방식이든 발전사업자와 지역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논의 진행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어떤 내용이 담길지 등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안들이 제출되어 경합할 필요성 있음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제안 이유

본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에너지전환 로드맵 및 폐지 타당성조사(제과제 폐지) 타당성조사(제과제 폐지)를 실시하여 발전사업자 및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의 수립을 위한 법률안 근거를 마련하고 제정(제과제 폐지)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제안 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하기 위하여 2023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담배·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그런데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대응 정책이 2020년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수 있는 지역 또는 계층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를 수립한 비 법률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임.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외국의 사례를 우리는 주목한다. 하지만 OECD 10위권인 우리나라는 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지 답답하다. 아니 부끄럽다.

독일의 경우는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135조 재정 투입 일자리, 발전소 보상, 지역사회 피해, 정책거버넌스, 탈석탄 비용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지난 8월24일 녹색전환연구소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기업의 정의로운 전환 직무: 국제사회에서 제시되는 지표를 중심으로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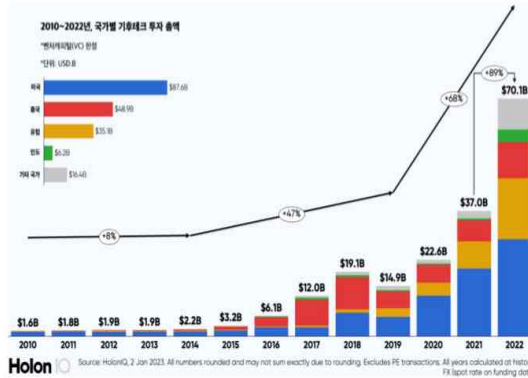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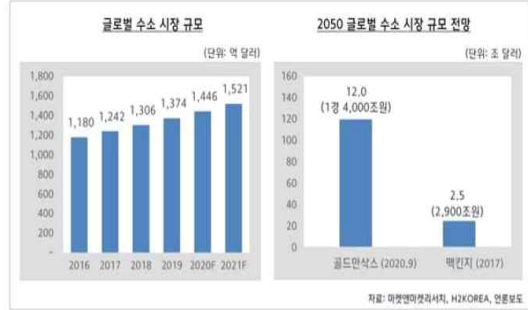
1. 세계의 탄소중립경제 동향

탄소중립에 따른 막대한 新시장 창출

✓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 계획

- 국제에너지기구(IEA): 2023년 세계 탄소중립 투자액 1470조 규모
- 블룸버그NEF(2021): 전세계 청정에너지 전환 약 10경 필요

구분	EU	미국	중국	일본
탄소 중립	2050년 (‘30년 55% 감축)	2050년	2060년	2050년
대표 정책	그린딜	청정에너지	제로탄소 중국	그린성장전략
예산	1조유로 (1,400조원 이상) (2030년까지)	2조달러 (2,220조원) (2023년까지)	-	2조엔(약 20조원) (2030년까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계 강조 • 지속가능 금융 • 공정전환 지원 • 디지털화 추진 • 배터리 자립 추진 • 탄소국경세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투자 • 친환경차 확대 • 화석연료 규제 (보조금 철폐) • 연구개발 강화 • 탄소국경세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적→적극적 • 공기업 주도 • 교통수송 중심 (신에너지차) • 기술혁신 가속화 • 탄소배출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50~60%) (해상풍력 강조) • 암모니아 발전 • 수소활용 확대 • 친환경차 확대 (배터리 공급망)



✓ 신시장 선점 위해 투자 확대 및 기술선점 심화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및 수소 가치 부각
- 이차전지 시장(전기차 확대) 급성장 전망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의 갈등 이슈와 우선순위>

갈등 이슈	정의 및 범위	갈등의 정도	사회적 영향
일자리 갈등	석탄발전소 폐쇄 속도 증가로 인한 관련 산업 근로자들의 일자리 전환 및 일자리 창출 문제로 인한 갈등	1순위	3순위
발전소 보상 관련 갈등	설계 수명 대비 조기 폐지되는 석탄발전소의 잔존가치(차조자산) 추정과 발전사업자에 대한 보상방식 및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갈등	2순위	
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사회의 경제사회적 피해와 신규 발전소 건설 및 가동에 따른 환경·건강 영향 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상에 관련된 갈등	3순위	1순위
정책거버넌스 관련 갈등	탈석탄 정책의 의사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결정자와 실무자 등 주체간 갈등		
탈석탄 비용 관련 갈등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부담을 위한 재원 마련과 재원의 사용 범위를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의 갈등	2순위	
탈석탄 속도 및 에너지안보 관련 갈등	에너지수급 불안정 우려로 인한 석탄발전 폐지 속도 조절 및 전력믹스 구성과 관련한 갈등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갈등	발전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역할 분담 및 전환간 갈등 등		

(출처: 정훈(2022),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입법과정) 24

(World Benchmarking Alliance, WBA)는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기업/산업 플랫폼, 정부기관, 다자기관,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글로벌 연합체이며, 인권과 관련한 글로벌 목표에 대한 민간 부문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벤치마킹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탈탄소화를 포함하여 기업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조정 및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평가”, “사회전환 프레임워크” 등을 개발하였다. WBA 벤치마크

는 정의로운 전환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인센티브에 맞춰 기업의 조율능력을 향상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며 평가지표를 총 6개를 선정하고 세부지표를 포함하여 16점 (4/4/2/2/2/2) 만점으로 평가하여 발표하였다.

주요평가내용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및 이해관계자 참여, 전환 계획, 녹색&좋은 일자리 창출, 제공 및 접근을 위한 지원, 재교육·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유지 및 재취업지원, 전환을 위한 사회적 보호와 영향, 사회적 보호정책 및 규제를 위한 기업의 옹호와 지지를 계량화하였다.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례는 없다.

■ 23.08.24 정의로운 전환녹색전환연구소 발제자료 인용

사회적 대화와 이해관계자 참여 모범사례1: ENGIE

석유가스회사인 ENGIE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며, 노동자, 지역사회만이 아니라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여 4점 만점을 획득함

ENGIE's commitment for just transition

Taking into account the social impacts of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Employment

Processes and initiatives to boost:

- job opportunities,
- skill development
- and employee retention,
- along with measures to support employees

Regional benefits

Initiatives to create economic value for the regions and benefits for the communities

Stakeholder inclusion

Stakeholder inclusion to promote just transition in a constructive way

Seeking cooperation/alignment between the company,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ENGIE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며, 노동자, 지역사회만이 아니라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함

© IGT 2023

JTI 1 모범사례2: Enel(전력회사)

JTI 1(사회적 대화와 이해관계자 참여)에서 Enel은 4점 만점

The Future-e project for the coal-fired plant in Andorra, Teruel (Spain)

Enel은 사회적 대화와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14억 8,700만 유로 규모의 "Future-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스페인 안도라와 테루엘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1,725MW 규모의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 14억 8,700만 유로.

이전, 기존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153명의 고용은 그대로 유지했으며, 초기부 Enel은 노동조합과 대화를 나누어 개인 및 단체의 만족을 충족시켰음. 경제적 안전망과 재교육 기회가 포함되었음.

지역커뮤니티에도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약 90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음.

이 과정에서 ILO 노동자 권리에 따라 노동자 및 노동조합 대표와의 사회적 대화가 강조되었고 사회적보장(연금, 건강 포함) 및 급여 보장을 약속했음.

© IGT 2023

JTI 4 모범사례1: Royal Dutch Shell(석유/가스 회사)

JTI 4(재교육,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과 유지)에서 Shell은 2점 만점 중 1.5점

The energy transition will create employment and opportunities for people to learn new skills. It may also adversely affect workers and communities, for example in areas where traditional products, business activities or jobs are phased out.

Shell의 2050년 중립 전략에 의해, 석기물의 재탄소화공정이 영향을 받아 1,300명에서 약 800명 규모로 고용이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Shell은 노동조합과 함께 'upskilling 위원회'를 만들어 전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Shell Singapore and union launch upskilling council to ready staff for future roles

Shell 전환전략 보고서(2021, 25p)에는 "에너지 전환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기회와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 이것이 역으로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전환의 장밋빛 미래만 말하지 않고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함께 제시함.

© IGT 2023

JTI 4 모범사례2: Enel(전력회사)

JTI 4(재교육,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과 유지)에서 Enel은 2점 만점 중 1.5점

Enel은 노동조합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upskilling/reskilling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결과도 함께 제시함.

에너지전환을 위해 2020년에 60%의 노동자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지속적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음

© IGT 2023

5. 지금 발전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 요구이다.

- ① 발전소 노동자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 개인 동의를 통해 나이, 임금, 부양가족, 주거, 전환 희망, 직종 등 민감정보를 파악해 발전소 전체 노동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및 폐쇄 후 사후관리 방안은 시급하다.

선고용-후교육 도입, 이주 주거 대책, 교육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데이터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관리체계에 충남, 경상도, 인천시, 발전사 공유를 통한 실질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② 재생에너지 계통 자격증 취득과 산학협력반을 운영해 실질적인 직무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귀농·귀촌 지역산업 프로그램으로 지역붕괴를 최소화해야 한다.
- ③ 자격증 취득 지원과 연계한 취업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는 정의로운 전환기금에서 업체 교육훈련비, 교육휴가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고 자격 취득 후에는 태양광, 풍력, 수소, LNG 발전소 등 실질적인 취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 ④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부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정책에서는 발전소 폐쇄 시 전환 배치만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 대책인 재배치 시 정주조건 마련은 빠져 있다.
(전환재배치 저임금 비정규직 이주 시 공공임대주택 제공, 저리전세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이주로 인한 아동 교육 지원방안)
- ⑤ 고용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주민들의 심리 상담을 실행해야 한다. 수요조사를 통해 해당 노동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심리상담 및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노동자뿐만이 아닌 모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거버넌스 구축과 법제화를 통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린워싱이 아닌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 바로 우리의 몫이다.

【종합토론】

MEMO